

광주시-시의회-전남도, 전국 첫 '미이용 산림자원센터' 운영

산속 버려진 목재, 자원으로 재탄생... 톱밥·우드칩 등 호평

'산속에 버려진 목재가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전라남도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장흥에 유치해 전국 최초로 조성, 3~4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신재생 에너지연료, 축사 깔개, 친환경 퇴비 등으로의 자원화가 쉬워졌다.

장흥군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장시설, 보관장고 등 기반시설과 이동식 파쇄기, 운반 차량 등의 기계장비를 갖춰 양질의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하는 수집·가공·유통시스템이다.

벌채 후 산에 남겨지는 수목 부산물은 전체 벌채량의 약 44%나 된

다. 조립사업 등 산림경영에 지장을 주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산림 경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에너지연료로서 목재펠릿과 목재칩 사용량이 늘고, 특히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차등 부여하는 공급 인증서 가중치(REC) 2.0을 받으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톱밥 가공에 필요한 원목은 전남지역 원목생산업자를 통해 구입하고, 벌채·숲 가꾸기·가로수 가지치기 등 산림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인근 지자체를 통해 수집해 연간 톱밥 2만 톤과 우드칩 5만

여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산 지역 목재로 생산한 톱밥은 장흥을 비롯한 전남지역 한우농가와 승마장 등에 축사 깔개용으로 수입산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우드칩은 공원이나 화단 깔개용, 과수·원예농가 멀칭용, 목재펠릿, 발전소 연료용, 친환경 퇴비 생산용으로 판매한다.

장흥 장평면에서 16년간 한우 170마리를 사육해온 문형률 씨는 "국내산 소나무로 만든 톱밥은 먼지가 없고 소나무 향이 가득해 별레가 축사에 오지 않을 것 같다"며 "수입산 톱밥은 보존을 위해 약품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품 사용이 제한되므로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톱밥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



전라남도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장흥에 유치해 전국 최초로 조성, 3~4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림자원화센터 전경. /전남도 제공

산속에 방치된 목재 부산물을 축사 깔개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

해로부터 안전해지고, 환경이나 에너지자원 확보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며 "전국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 산림조합 간 협조체

계를 구축해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와 발전소 등 대규모 수요처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광주시, 제9회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6월18일까지 접수,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주간에 수상작 전시

광주광역시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12일부터 6월18일까지 '제9회 인권작품 공모전

'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광주인권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와 일상생활의 인권침해와 차

별사례,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이다. 공모 부문은 ▲시·표어·수필 등 창작글 ▲그림·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작품(그래픽) 등 2개다. 참가자격은 지역 제한없이 인권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거주

외국인이다. 개인 또는 3명 이내 공동출품이 가능하며, 6월18일까지 광주시 민주인권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인권분야와 각 공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흥

보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2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시장 상장과 총 44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7월6일 시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10월 열리는 제11

회 세계인권도시포럼주간에 전시하는 등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인권작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자연재해 안심 광주 만들기 '첫 발'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광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연재해 관련 시, 자치구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의 과업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기초자료 취합에 필요한 제공 방법과 범위를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안전단체 대표들은 타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당초 용역 기간보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연되는 사례를 감안, 용역 추진 과정 등 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종합계획을 통해 그동안 예측 불가능했던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양상과 각종 도시개발 등 도시계획과 인문학적 요인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향후 10년간 예방대책, 소요예산, 우선순위를 담은 단계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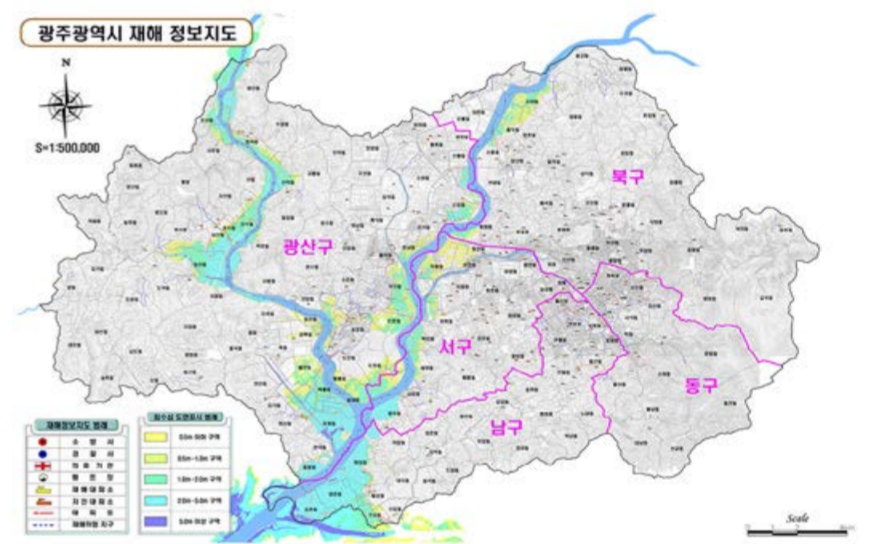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번 용역과 관련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상 '우수 유출저감대책'과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관할 지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등 8종의 자연재해 유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대책을 제시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절차 중 하나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유형별 재해위험요소를 재검토하고 도시행정과 행정환경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앞당겨 2023년 상반기까지 24개



월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 올해 1월중 용역실시 공고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입찰,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3월30일(췌건화, 췌원우기술개발, 췌케이씨아이, 췌동서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했다.

/이기영 기자

